

2025년도 제74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2 교 시

- 일반[필수·선택] -

목 차

【경 찰 학】 (필수)	1
【범 죄 학】 (필수)	8
【행 정 법】 (선택)	14
【행 정 학】 (선택)	21
【민 법 총 칙】 (선택)	26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대 학

1. 경찰개념 형성 및 변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사무를 다른 일반행정 기관으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 ②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 자치경찰의 직무범위에서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제외시켰다.
- ③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권 발동의 성질과 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 ④ 우리나라의 미군정 시기 경찰은 경제경찰과를 폐지하고 종래에 경찰에서 담당하던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다.

2.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 국내법적 또는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일정한 한계가 있다.
- 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공관지역과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불가침이다.
- 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사람 등의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외교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하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해당하고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 나.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법·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하며, 예방경찰은 경찰상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총포·도검의 취급 제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를 보호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권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라 구분하며,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임무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은 최초로 이를 구분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실정법상의 규정을 토대로 경찰의 임무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 나.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이다.
- 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은 위협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정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협의’로 구분한다.
- 라.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 마. 경찰의 임무를 치안서비스의 제공으로 볼 때,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오늘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경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협의의 경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 ② 경찰기관 외의 일반행정기관에서는 발동할 수 없다.
- ③ 협의의 경찰권은 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상 위해나 장애에 직접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도 권한이 발동될 수 있다.
- ④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이나 법원의 법정질서유지권은 협의의 경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경찰청장, 각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 ③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④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7. 경찰 기본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주의 이념은 국가조직과 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구성원 상호관계에서도 중요하다.
- ②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 ③ 중앙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적절한 권한분배 및 경찰관의 민주주의 의식 확립 등은 경찰의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대내적 방안이다.
- ④ 헌법 제10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는 인권존중 이념과 관련된 규정이다.

8.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권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②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소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전문직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을 소유하지만, 이러한 힘을 공적 이익에만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 ④ 전문직업화를 위해 고학력을 요구할 경우, 경제적 약자 등은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공직 진출이 제한되는 등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인물과 활동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나석주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나. 김 석 :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배후 지원하였다.
다. 김용원 :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 경무국장을 역임하였고, 귀국 후 군자금 모금, 체포와 병보석을 반복하다가 순국하였다.
라. 김 철 : 의경대 심판을 역임하였으며,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잠입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감금당하였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영국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829년 근대경찰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필경(Sir Robert Peel)의 제의로 영국 최초의 근대 경찰조직인 수도경찰청이 창설되었다.
- ② 1964년 「경찰법」을 통해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 3원 체제를 설정하였다.
- ③ 2002년 「경찰개혁법」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 ④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은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4원 체제로의 변화를 통해 자치경찰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12.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중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oriented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확인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경찰인력과 자원을 배치하여 범죄나 무질서에 대한 예방을 강조한다.
- ② 시민의 서비스 요청에 반응하는 경찰활동의 반응적 기능, 경찰관들이 확인된 범죄문제에 대해 조직화된 순찰전략을 개발·기획하는 사전적 기능과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확인하고 알려주기 위한 경찰과 시민 사이의 적극적인 협력적 기능을 연결하고자 시도한다.
- ③ 범죄자의 활동과 조직범죄집단·중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예방 등에 초점을 두며 증가되는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범죄정보를 통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강조한다.
- ④ 형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대신에 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분석적 접근법을 강조한다.

13. 경찰통제의 필요성과 기본요소를 구분할 때,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권한의 분산 : 경찰의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간의 권한 분산, 상위계급자와 하위계급자 간의 권한 분산 등이 필요하다.
- ② 정보의 공개 : 경찰의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독선과 부패는 억제될 수 있다.
- ③ 인권의 보호 : 경찰활동은 특성상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 ④ 참여의 보장 : 경찰은 국민에게 행정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14. 경찰홍보의 유형과 관련하여 (가)와 (나)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는 인쇄매체, 유인물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긍정적인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의미하고, (나)는 단순히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대중매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경찰의 긍정적인 측면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 | | (가) | (나) |
|---|--------------|-------------------------|
| ① | 협회의 홍보 | 언론관계(Press Relations) |
| ② | 협회의 홍보 | 대중매체관계(Media Relations) |
| ③ |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 | 언론관계(Press Relations) |
| ④ |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 | 대중매체관계(Media Relations) |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① 정당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공립대학의 부교수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의 대상자로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규정되어 있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려면 해당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기관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포함된다.
나.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라.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18.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③ 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 ④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19.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증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비상근무 율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② 250cc 오토바이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그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 ③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인정하려면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④ 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하였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초자료가 되는 위반사고접수제조회와 임시운전면허증상의 면허의 종류 내지 소지면허란에 1종대형만을 기재한 경우에,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면 제1종대형 운전면허와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모두 정지된다.

2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불심검문 대상자가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서 한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원집행에 해당한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흥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23. A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은,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乙을 발견하였다. 甲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乙에 대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甲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B보건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나. 甲은 乙이 휴대하고 있는 흥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관서에 이를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 다. 乙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甲은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즉시 그 사실을 A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甲이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보고받은 A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을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가. 보상금의 최고액은 ()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나.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보상금 환수통지를 받은 경우, 보상금 환수통지일부터 ()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① 35 ② 40 ③ 45 ④ 50

25.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③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이 포함된다.
- ④ 살수거리가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인 경우 수압기준은 7바(bar) 이하라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이하 ‘제6조’)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나.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다. 제6조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라.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 경찰서장은 범칙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나.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낸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8.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대형낙석이 교통정리를 위해 이동 중이던 순찰차를 덮쳐 경찰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고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스스로 차량을 옮기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위 차량을 견인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원리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임무를 권한과 책임에 따라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 ①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행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계층에 따라 의사결정의 검토가 이루어져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③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신속한 도입이 어렵다.

④ 특정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용이하며 업무의 세분화로 인해 시간과 경비가 절약될 수 있다.

30.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관한 비교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직위분류제는 일반행정이 양성에 유리하다.
나. 직위분류제는 부서 간의 횡적 협조에 용이하다.
다.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 계급제는 보수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마. 계급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바.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미약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쉽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1.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행정의 재량범위가 확대되어 예산유용 및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국민이 정부의 활동과 목적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나 단위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다.
③ 자본예산제도는 기획(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ing), 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며 장기적인 계획에 중점을 둔다.

3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공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3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찰부서장은 감찰정보의 구분 및 감찰활동 착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찰정보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④ 감찰관은 민원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와 감찰조사를 종결하였을 때에 민원인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감찰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34.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출동요소”란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 교통순찰차, 고속도로 순찰차,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자 및 인접 경찰관서의 근무자,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112신고 및 치안상황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말한다.
② 모든 출동요소는 사건 장소와의 거리, 사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신고 대응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출동 지령이 없더라도 스스로 출동의사를 밝히고 출동하는 등 112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③ 112신고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다.
④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 또는 code 4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가.

검사는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 범죄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① 가.(O) 나.(O) 다.(O) 라.(O)
② 가.(O) 나.(X) 다.(O) 라.(X)
- ③ 가.(X) 나.(X) 다.(O) 라.(O)
④ 가.(X) 나.(O) 다.(O) 라.(X)

37. 「청원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업장이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38. 「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단,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제외한다.
- ②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 명령이 없을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 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외교부장관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9.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부터 (다)까지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가)

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나)

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다)

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나)	(다)
①	경찰서장	시장등	경찰청장
②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	시장등
③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
④	시·도경찰청장	시장등	경찰청장

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설정된 경계표지를 말하므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이 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④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법령상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에만 설정되어야 한다.

1.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벤담(Bentham)은 처벌의 비례성과 형벌의 특별예방을 강조하였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였다.
- ② 고전주의 범죄학의 영향을 받은 현대 범죄이론에는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 인지이론, 행동주의이론 등이 있다.
- ③ 인간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이므로 경미한 범죄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④ 규문주의 형사사법을 비판하고, 적법절차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하는데 공헌하였다.

2.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가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사회계약에 있으며, 사회계약시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 ② 개인의 정치적·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적 형벌의 적용은 폐지되어야 한다.
- ③ 입법부의 역할은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이고, 판사의 역할은 재량권을 가지고 유죄의 여부 및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 ④ 범죄의 심각성은 그것이 사회에 끼친 해악의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지, 범죄자의 개인적인 동기와는 무관하다.

3. 페리(Ferri)가 주장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자의 개인적(인류학적), 물리적 요인이 일정한 사회적 요인과 결합할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한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 ② 과도한 개인주의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사회문제에 효과적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독재적 전체주의 국가이념을 표방하는 파시즘(Fascism)에 동조하였다.
- ③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형벌보다는 범죄의 충동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④ 범죄행위는 생물학적·심리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후에 다른 사람의 범죄를 모방한 결과라고 하였다.

4.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덕데일(Dugdale)은 주크 가(The Jukes) 연구를 통해 범죄의 유전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 ② 랑게(Lange)는 가계 연구에서 밝히기 어려운 범죄성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쌍생아 연구를 하였다.
- ③ 허칭스와 매드닉(Hutchings & Madnick)의 연구에 따르면, 친부와 양부 모두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한 쪽만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비해 입양아의 범죄 가능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④ 크리스티안센(Christiansen)은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성별을 불문하고 이란성 쌍생아보다 한 쪽이 범죄자인 경우에 다른 쪽도 범죄자인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범죄성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은 없다고 하였다.

5. 정신분석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프로이트(Freud)는 특정한 사람들은 슈퍼에고(Superego)가 과잉발달되어 죄책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어 죄의식 해소와 심리적 균형감을 얻고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 ② 아들러(Adler)는 인간의 무의식에는 열등감 콤플렉스가 내재해 있는데, 일부는 이러한 열등감을 과도하게 보상받기 위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 ③ 에릭슨(Erikson)은 모성의 영향을 중시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적인 애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불균형적 인성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에 빠진다고 하였다.
- ④ 레들과 와인맨(Redl & Wineman)은 비행소년들이 적절한 슈퍼에고(Superego)를 형성하지 못하고 에고(Ego) 또한 이드(Id)의 충동을 무조건 수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에고(Ego)가 슈퍼에고(Superego)의 억제 없이 이드(Id)의 욕구대로 형성된 경우를 '비행적 자아'라고 지칭하였다.

6. 학습이론과 관련하여 아래의 공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는 인간의 정서반응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포증(phobia)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강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덩치가 크고 사납게 생긴 개를 보고 크게 놀란 경험이 있는 어린아이는 아주 강력하고, 일반화된 '개 공포증'을 학습할 것이며, 이후에는 다른 개에게도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 ① 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ing)
- ② 조작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
- ③ 사회 및 인지학습(Social and Cognitive Learning)
- ④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

7. 인간생태학과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크(Park)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동·식물집단과 마찬가지로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연구하고, 이를 인간생태학이라고 하였다.
- ② 버제스(Burgess)는 특정 도시의 성장은 도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동심원을 그리며 진행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침입·지배·계승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 ③ 쇼와 맥케이(Shaw & McKay)는 동심원을 형성한 도시 가운데 급격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진 전이지대에서 청소년비행 등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해체라고 하였다.
- ④ 샘슨(Sampson)은 사회해체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원 상호간의 응집력이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제시하였다.

8. 머튼(Merton)의 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사회의 구조는 문화적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규범적 수단의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 ② 머튼은 재산범죄 등 경제적 동기의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목표와 수단에 대한 5가지 적응유형으로 동조형(Conformity), 혁신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회피형(Retreatism), 반역형(Rebellion)을 제시하였다.
- ④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물질적 성공을 문화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9.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거시적 수준에서 하류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긴장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 인간은 부·명예와 같은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였을 때, 긴장하게 된다.
- ㉢ 인간은 이혼, 해고, 친구의 죽음 등 긍정적인 자극이 제거되었을 때, 긴장하게 된다.
- ㉣ 인간은 직장 내 갑질, 가정폭력, 선생님의 꾸중 등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긴장하게 된다.
- ㉤ 특히 청소년들은 긴장상태가 지속되면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비행에 빠지기 쉽다.
- ㉥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중류사회의 성공목표를 합법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긴장상태에 놓였을 때, 경험하는 죄책감, 불안감, 증오심을 지위좌절(Status Frustration)이라고 하였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0. 뒤르켐(Durkheim)의 사회사상과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근대 산업화과정에서 사회는 기계적(Mechanical) 사회에서 유기적(Organic) 사회로 급격하게 변동하였다.
- ㉡ 사회통합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화되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아노미(Anomie)라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 ㉢ 사회병리의 대표적인 현상은 자살인데, 이는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통합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 ㉣ 자살은 아노미적 자살,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무동기 자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아노미적 자살이 가장 큰 문제이다.
- ㉤ 어느 사회이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존재하는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 20세기 범죄생태학, 긴장이론, 통제이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1.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차별적 접촉이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정의에 노출되어있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직접 접촉은 물론 영상 등을 통한 간접 접촉도 포함된다.
- ② 정의란 개인이 특정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 또는 태도를 말하며, 여기에는 범죄에 대한 긍정적 정의와 부정적 정의는 포함되나 중화적 정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차별적 강화는 행위로부터 얻게 되거나 예상되는 보상과 처벌의 균형을 의미하고,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이나 금전적 보상 등이 빈번하고 강할수록 차별적 강화는 약하게 나타난다.
- ④ 모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위를 따라 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위의 시도나 범죄 수법에 영향을 미치지만 행위의 지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 낙인이론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낙인이론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개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낙인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실증하고 있다.
- ② 탄넨바움(Tannenbaum)은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범죄행위의 원인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낙인의 결과라고 하였다.
- ③ 공식적 형사처벌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 ④ 슈어(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이 정형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3.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의 제정과 집행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운영을 통제하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 ② 범죄원인을 밝히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규범에 동조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 ③ 살인, 강도, 절도, 도박 등 일반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④ 볼드(Vold)의 집단갈등이론은 인종분쟁, 노사분쟁과 같은 이익집단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범죄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14.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요인은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일상적인 유대이며, 그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되었을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 ② 사회유대의 요소에는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이 있다.
- ③ 사회유대이론은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공식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 ④ 사회유대이론과 억제이론은 통제력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5. 사이크스(Sykes)와 마짜(Matza)가 제시한 중화의 기법과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해(손상)의 부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면서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② 충성심(상위가치)에 대한 호소: 특수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A, B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의리상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③ 피해자의 부인: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가 야간에 혼자 외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 폭력을 행사하면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범죄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성 억압은 사유재산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여성 억압과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사유재산의 불평등이 극대화된 자본주의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부장제 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은 형법과 형사사법 기관에 의해 범죄로 정의된다.

- ① 차별적 페미니즘(Differential Feminism)
- ② 자유주의적 페미니즘(Liberal Feminism)
- ③ 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
- ④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Marxist Feminism)

17. 여성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폴락(Pollak)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행위를 덜 할 뿐만 아니라, 은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계상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②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이유로는 사범당국의 남성들이 발휘하는 기사도 정신이나 여성에 대한 온정주의가 있다.
- ③ 데일리(Daly)와 체스니-린드(Chesney-Lind)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전통적인 여성성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 ④ 헤이건(Hagen)은 권력-통제이론에서 계급, 성별 불평등과 청소년의 성별 범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18. 발달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자 삶의 궤적을 통해 범행의 지속 및 중단 요인을 밝히는데 관심을 둔다.
- ② 모피트(Moffitt)에 따르면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ce-limited)은 신경심리학적 결함으로 각종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 ③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은 글룩(Glueck)부부의 연구를 재분석하여 생애과정이론을 제시하였다.
- ④ 범죄경력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는 결혼과 취업이 있다.

19. 범죄학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험연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연구대상 집단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 ②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스스로 범죄집단에 들어가 범죄자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의 객관화가 어렵고, 윤리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③ 사례연구는 과거중심적 연구방법으로 특정 범죄자의 성격, 성장과정,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④ 문헌연구는 연구자가 설문 및 사례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 상대적 암수범죄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에 알려진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이 해결할 수는 없다.
- ② 수사기관에서 처리한 모든 범죄가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기소된 모든 범죄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 ④ 모든 범죄가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21. 범죄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식범죄통계에서 범죄율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몇 건의 범죄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며, 검거율은 경찰이 한 해 동안 범인을 검거한 사건에서 한 해 동안 인지한 사건 수를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한다.
- ② 범죄피해조사는 공식 형사사법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암수범죄를 밝히는데 유용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전통적인 범죄가 조사대상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 ③ 경찰의 「범죄통계」는 각 경찰관서에서 입력한 범죄발생 사항을 집계한 것으로 범죄발생 및 검거, 범죄발생 상황,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④ 자기보고식조사는 보통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각 유형별로 몇 건의 범죄를 했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인데, 익명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가는 수법을 말한다.

- ① 피싱(Phishing)
- ② 파밍(Pharming)
- ③ 스미싱(Smishing)
- ④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23. 약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약물범죄는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불법약물의 사용, 제조,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 ② 작용에 따른 약물의 종류 중 각성제는 중앙신경계통 자극제로 아편, 몰핀, 헤로인, 합성제재 등이 있다.
- ③ 작용에 따른 약물의 종류 중 환각제는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로 LSD, 마리화나 등이 있다.
- ④ 세계적인 헤로인 생산지에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3국의 접경 지역에 있는 황금의 삼각지대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3국의 접경지역에 있는 황금의 초승달 지역이 있다.

24. 홈즈와 드버거(Holmes & DeBurger)의 연쇄살인범 유형 중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쇄살인범 A는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의 범행으로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명하였으며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사망한 사람은 A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남편, 친아들과 친딸, 지인의 남편이었고, 실명한 사람은 친모와 친오빠 등이었다.

- ① 망상형 연쇄살인범(Visionary Serial Killers)
- ② 사명형 연쇄살인범 (Mission-Oriented Serial Killers)
- ③ 쾌락형 연쇄살인범(Hedonistic Serial Killers)
- ④ 권력형 연쇄살인범(Power-Control Serial Killers)

25.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로 직업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를 의미하고, 피해가 직접적이고 암수범죄의 비율이 낮으며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 된다.
- ② 화이트칼라 범죄는 범행동기에 따라 조직적 범죄와 직업적 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직업적 범죄는 사기기만형, 시장통제형, 뇌물매수형, 기본권 침해형으로 구분된다.
- ③ 피해자 수에 따라 살인은 일반살인과 다중살인으로 구분되며 다중살인은 다시 한 사건과 다음 사건 사이에 심리적 냉각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연속살인과 대량살인으로 구분된다.
- ④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에 포함한다.

26. 범죄 및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의 개념과 원인 등은 합의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 ② 상호주의적 관점은 형사사법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이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조직되고, 어느 한 부분의 제도 변화가 다른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③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주장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을 의미한다.
- ④ 범죄학은 범죄와 범죄자, 범죄원인 및 이에 대한 통제방법 등을 연구하는 경험과학적인 성격이 강하다.

27.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 없는 범죄와 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적용 가능하다.
- ②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범죄화되었다.
- ③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④ 입법부에 의한 법률상의 비범죄화뿐만 아니라 경찰·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실무상의 비범죄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28. 전환처우(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낙인효과에 의한 2차 범죄를 방지하고 법원의 업무경감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의 능률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 ② 검찰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 법원의 집행유예와 구속적부심사제도 등이 있다.
- ③ 경찰 단계의 훈방과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 ④ 교도소의 수용인원을 줄여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29. 뉴만(Newman)의 방어공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어공간이론은 많은 도시시설 가운데 특히, 주거시설에 초점을 두고 정립되었다.
- ② 방어공간에는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영역성을 강조하였다.
- ③ 방어공간 구성요소 가운데 이미지는 특정 지역·장소에 있는 특정한 사람이 범행하기 쉬운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방어공간의 영역은 사적 영역, 준사적 영역, 준공적 영역, 공적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준공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범죄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다.

30. 사빌과 클리블랜드(Saville & Cleveland)가 제시한 2세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구성요소 가운데 핵심 전략(Core Strategy)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
- ② 연계성(Connectivity)
- ③ 지역사회 문화(Community Culture)
- ④ 한계수용량(Threshold Capacity)

31.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 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②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③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32. 피해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멘델손(Mendelsohn)은 비난 정도를 고려한 법적 유책성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 ② 헨티히(Hentig)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취약한 피해자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과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③ 울프강(Wolfgang)은 살인사건 기록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범죄 유발 동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 ④ 미쓰와 메이어(Miethe & Meier)는 생활양식-노출이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피해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33. 보호관찰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설 내 처우가 초래하는 비인도성·낙인효과 등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 ② 구금 비용의 절감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 ③ 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 ④ 재범 방지에 대한 실증적 효과가 탁월하고, 형사사법망을 축소시킬 수 있다.

34.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는 질병예방에 관한 보건의료모형을 응용하여 3단계로 분류한 범죄예방모형을 제시하였다.
- ② 이웃감시와 주민순찰은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가 제시한 1차적 범죄예방과 관련이 있다.
- ③ 코니쉬와 클락(Cornish & Clarke, 2003)이 제시한 상황적 범죄예방에서, 관련 규정과 규칙을 명확하게 하고 표시판 등을 통해 양심에 호소하는 것은 ‘변명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기법이다.
- ④ 코니쉬와 클락(Cornish & Clarke, 2003)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목표를 ‘노력의 증가’, ‘위험의 감소’, ‘보상의 감소’, ‘변명의 제거’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35. 특정한 개인의 범행가능성에 대한 범죄예측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원칙에 반할 수 있다.
- ② 기술적인 측면에서 100%의 정확도를 가진 예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류 긍정(False Positive)과 오류 부정(False Negative)의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③ 예측 항목에 성별, 직업, 소득수준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차별대우 등 공평한 사법처리에 반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범죄예측은 형사사법 절차 중 예방 및 재판 단계에서는 유용하나, 수사 및 교정 단계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36. 소년범죄 및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며,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도 「소년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밀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번제(Auburn System)는 엄정독거제의 결점을 보완하고 혼거제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주간에는 침묵상태에서 혼거작업하고 야간에는 독거수용하는 제도이다.
- ② 우리나라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독거실 부족 등의 사유로 혼거수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③ 귀휴제는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이나 사회에 내보내어 장기간 수형생활로 인하여 단절된 사회사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 ④ 일반귀휴는 형집행기간에 포함하나, 특별귀휴는 형집행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8.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아래의 연구 및 견해를 제시한 사람은?

- ㉠ 선량한 인간이 어떻게 악인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루시퍼 효과(Lucifer Effec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 모의교도소 실험을 통해 인간의 행위와 본성을 연구하였다.
- ㉢ 인간의 본성은 생물학적 유전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
- ㉣ 인간은 상황에 따라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

- ① 밀그램(Milgram)
- ② 짐바르도(Zimbardo)
- ③ 험프리스(Humphreys)
- ④ 손다이크(Thorndike)

39.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과 중 이탈리아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롬브로조(Lombroso)는 생물학적 퇴행성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유형의 범죄자는 교정의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격리 또는 도태처분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 ② 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자를 생래적 범죄자, 정신병적 범죄자, 상습성 범죄자, 우발성 범죄자, 걱정성 범죄자, 폭력성 범죄자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③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학」(Criminologia)이라는 저서를 통해 사실학적 의미의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 ④ 가로팔로(Garofalo)는 정상적인 사람은 정직성, 동정심, 성실 등과 같은 이타적 정서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데 반해 범죄자는 이러한 정서가 결핍되었다고 하였다.

40. 범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국가는 모든 국민의 보호자이며 부모가 없는 경우나, 있더라도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 대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소년보호제도의 기본이념은 국친 사상이다.
 -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 된 이후에 법원에 공소 제기 된 범죄에 대하여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모든 범죄에서 미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기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므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 ㉣ 우리나라에서는 소년형사범을 대상으로만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③ 「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지니는 행위이다.
- ④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

2.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작용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 ③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③ 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료 납입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④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4. 종교법인 甲은 A시의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A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甲은 A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며 A시 조례에 의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하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들었다. 그 후 甲은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A시장은 甲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담당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 ②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외부적으로 표명된 후, 표명될 당시의 사정이 사후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甲은 담당공무원의 답변 내용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할 수 있다.
- ④ A시장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甲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5. 「행정기본법」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의 ‘법령등’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함)

-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② 행정청은 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 ③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 ④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 ② 상위법령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세부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인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법규명령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재판의 전제’를 요소로 하는데, 이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위법인지가 문제된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조항이 위헌·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②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당해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③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여부가 해석상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8. A시장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甲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이하, 「별표 23」이라 함)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별표 23]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 ② A시장의 처분이 [별표 23]에 따라 행해졌다면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별표 23]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별표 23]에 따른 영업정지 1월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④ A시장이 [별표 23]을 따르지 아니하고 甲에게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9. 행정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이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면,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 ② 처분의 근거 법령이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衡量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사유가 된다.
- ③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였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한 것은 아니다.

1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 ② 후행 도시·군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군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군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군계획을 결정하여 선행 도시·군계획을 폐지한 부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③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을 통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군계획의 특성상 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 A의 인가·고시가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의 인가처분은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이다.
- ②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A의 인가가 있으므로,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는 치유된다.
- ③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다.
- ④ A의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고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다투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12.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 ② 구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이다.
- ③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의 제한적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한다.
- ④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13.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건축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A시 소재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건축허가가 있으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A시장은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건축허가의 근거 법률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인허가에 한정된다.
- ③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요건의 미비로 건축허가가 거부된 경우, 甲은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재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한다.
- ④ A시장이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 ②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 ③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특정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15. 공정력 및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 ② 국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민사법원이 해당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영업허가의 취소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민사법원은 미리 항고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명령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16. 처분의 취소·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②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③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④ 조세 부과에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행해진 체납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17.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선행 대집행제고처분과 후행 대집행비용납부명령

나. 선행 과세처분과 후행 체납처분

다. 선행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후행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

라.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라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 ②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부관 중에서도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19.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나 건물의 명도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데는 직접적인 실행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을 실현할 때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③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라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④ 일정기간까지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2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과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부과될 수 있다.
-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
- ③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건축관련 법령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21.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이미 조사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대상자를 재조사할 수 있다.
- ②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등을 포함하여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정조사의 한 단계인 시료의 채취가 행정규칙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위법의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2. 甲은 A시에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시장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甲에게 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 ② A시장이 甲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③ A시장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甲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 ④ A시장이 甲에 대한 처분을 할 때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을 할 때에는 甲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법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 ②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③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24.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법원에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 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5.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수탁사인에 대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원수탁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행한 직무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 및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 ③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④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6.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사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②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경찰관이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7. 현행법상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 ②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처분
- ③ 「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처분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처분

28.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한민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해당 학교법인 소속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원고적격이 없다.
- ③ 재단법인 甲 수녀원은 매립목적용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④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29.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세무조사는 과세처분을 위한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세무조사결정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결격사유가 있어 행하여진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요청하는 결정은 해당 사업자에게 장차 후속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0.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 ②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③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도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
-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31. 「행정소송법」상 잠정적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가 허용되기 위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일 필요는 없다.
- ② 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도, 특별한 이익의 존부와 관계없이 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

32. 취소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미친다.
- ②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③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후 법령이 변경되어 처분요건이 달라진 경우, 해당 법령에서 경과규정 등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청은 변경된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이미 해당 사유가 처분 당시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내세워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3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
- ④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송 결정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4.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가, 나, 다

35.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 따라 특정한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사무권한은 수임청에게 이전되고 수임청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 그 사무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②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하여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에게 해당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③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 ④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36.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법이 아닌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는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반된다.
 - ③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37.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가 있다.
 - ②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8.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
 -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 ④ 건축물대장에의 위반내용 기재 처분
3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0.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되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②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공용폐지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단과 상관없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
 - ③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된다.
 - ④ 공물의 인접주민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해당 공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10. 정부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금은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유사하나 계획변경 및 집행절차에 탄력성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② 특별회계는 예산단일의 원칙과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 ③ 일반회계는 기본적인 정부활동과 관련된 주요 재정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회계로서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이다.
- ④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 칸막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11. 우리나라 예산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예산안편성 지침 통보
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다.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라. 예산안 편성(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바. 예산안 국회제출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아. 본회의 심의·확정

- ① 가 → 나 → 다 → 라 → 바 → 마 → 사 → 아
- ② 나 → 가 → 다 → 라 → 바 → 마 → 사 → 아
- ③ 가 → 다 → 나 → 라 → 바 → 마 → 사 → 아
- ④ 나 → 가 → 다 → 라 → 바 → 사 → 마 → 아

12. 우리나라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는 재정운용계획이다.
-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해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하고, 각 부처가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 ③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다.
-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제도로서 신규투자 우선순위결정, 예산낭비 방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3. 다음의 특징을 지니는 예산제도는?

· 예산항목에 대한 개별 부서의 지출 통제
· 회계적 책임성 제고
· 구입한 재화나 자원에 의한 지출 분류
· 지출을 둘러싼 행정권 남용의 최소화

-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 ③ 계획 예산제도 ④ 영기준 예산제도

14. 다음의 지방세 중 도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 ③ 지방소비세 ④ 담배소비세

15. 민츠버그(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순구조(simple structure)에서는 전략부문에서 행사하는 힘이 강력하다.
- ②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기술구조가 조직의 핵심적인 부문이다.
- ③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의 핵심 조정 기제는 작업과정의 표준화이다.
- ④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서 유리한 조직구조 유형이다.

16. 연합모형(coalition model)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갈등의 준해결
- ② 문제 중심의 탐색
- ③ 표준운영절차(SOP) 중시
- ④ 불확실성의 선호

17.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맥클랜드(McClelland)는 성취동기이론에서 불만족을 주는 위생요인과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을 서로 다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 ② 매슬로우(Maslow)는 욕구계층이론에서 가장 하위 단계의 욕구로서 안전 욕구를 제시하였다.
- ③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행동으로 조직을 떠날 수 있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상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위 단계 욕구로 퇴행할 수 있다.

18.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형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상황적 유리성(favorableness)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경우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②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 모형에 따르면 높은 구조주도 행동과 높은 배려 행동을 동시에 보이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③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는 상황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해 부하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한다.
- ④ 서번트(servant) 리더는 부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를 발휘한다.

19.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명반론자기법은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면으로 제출한 후 토의를 거쳐 투표로 대안을 선정한다.
- ② 브레인스토밍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된다.
- ③ 명목집단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된 설문을 통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이 이루어진다.
- ④ 델파이기법은 의사결정에 참여한 집단을 둘로 나누고 의무적으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과정을 거쳐 대안을 선정한다.

20.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적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조직설계와 관리 방법은 없다고 전제한다.
- ②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이유를 조직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접근방법이다.
-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외부환경에 의해서 조직구조가 결정되는 피동적 존재로 보는 환경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
- ④ 조직군생태론에 따르면 조직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은 변이, 선택, 보존이라는 세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21.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② 직류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 ③ 직급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 ④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22.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겸임은 직위 및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 ② 전직은 동일한 직렬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파견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의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승진은 일반적으로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증대를 의미하며, 보통 보수의 증액을 수반한다.

23. 공무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의 한 유형이다.
- ②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 ③ 군인과 군무원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④ 법관과 외교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24.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동적 오류(stereotyping error)는 나이, 성별, 출신학교, 종교 등과 같은 평정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하여 평정자가 평소에 지닌 선입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②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는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항상 후한 점수 또는 박한 점수를 일관되게 부여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이다.
- ③ 연쇄효과(halo effect)는 평정 시점에 가까운 최근의 근무성적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④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들에게 중간이나 평균치 정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25.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안목을 가진 일반행정가 양성에 불리하다.
- ② 신분보장 강화로 인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져 행정의 비능률성을 초래할 수 있다.
- ③ 공직자로서의 봉사정신과 직업윤리적 가치관을 공고히 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26.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다.
- ②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
- ③ 역량평가를 통해 고위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다.
- ④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조한다.

27.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해제란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 행위를 말한다.
- ②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직위해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8. 신지방분권화의 등장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전국적·총량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 ②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은 이동의 시·공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 권역을 넓혔다.
- ③ 대량생산·대량소비·대중매체들에 의해 개인의 개성과 지역사회의 특수성 등 사회 각 부문의 고유한 가치가 거대화과 표준화에 밀려 상실되었다.
- ④ 세계화의 물결이 세계 각국의 지역사회로까지 확산하면서 국내 지방도시와 외국의 지방도시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교류·협력·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29.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특징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이고,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이다.
- ② 주민자치에서는 고유권설을 인정하는 데 비해, 단체자치는 수탁권설의 견해를 인정한다.
- ③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원리이고,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원리이다.
- ④ 주민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자신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대륙형 모델이고,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방정부가 사무를 처리하는 영국형 모델이다.

30. 기관대립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구조이며, 지방의회만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 ②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이를 중재하거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의 편중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③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다수의 위원이 의결과 집행에 관여하게 되어 민주적이고 신중한 행정에 유리하다.
- ④ 선거로 선출된 의원은 각자의 정치적 기반과 색채가 강하여 행정의 총괄조정이 어렵다.

3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조례제정 및 개폐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대표 및 사무 총괄권을 갖는다.
- ② 지방의회는 규칙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관리 집행권을 갖는다.
- ③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발안권을 갖는다.
- ④ 지방의회는 예산 의결권과 결산 승인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결처분권을 갖는다.

32.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상당 부분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지만, 유사한 관할지역 내의 주민을 공통의 고객으로 삼지는 않는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상 책임소재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되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이 있다.

33. 정책 네트워크 모형 중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모형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특정 정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과 개인들로
구성된다.

나. 공익을 저해하고 배타성이 강한 철의 삼각만으로 정책 과
정을 바라볼 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개방
적인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놓치기 쉽다.

다. 폐쇄적 경계를 강조하며 배타성이 매우 강해 다른 이익집
단을 철저히 배제하는 특징을 갖는다.

라. 정책 결정이 주요 참여자 간의 합의와 협력으로 일어난다고
간주하면서 이들 사이의 갈등 관계까지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34.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가 「권력의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에서 제안하였다.
- ② 지배계급인 엘리트들이 그들의 이익에 도전해오는 주장을 의도적으로 기각 내지는 방치하는 신엘리트 이론이다.
- ③ 중립적 행동을 반영하며,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무의사결정의 수단과 방법으로 폭력이나 테러 행위도 사용된다.

35. 정책참여자 간 관계모형에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 상호경쟁을 추구하고, 조합주의는 국가통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이익대표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 ② 다원주의는 개별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조합주의는 사회적 책임과 조화의 가치를 추구한다.
- ③ 다원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립적 심판관이며, 조합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 타협을 강조하고, 조합주의는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제도화된 협력을 추구한다.

36.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할인율이 높거나 할인 기간이 길어지면 현재의 가치가 작아진다.
- ② 발생 가능한 비용·편익을 화폐단위로 추정한다.
- ③ 비용·편익분석은 단일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을 산출해 내는 데 효과적이다.
- ④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만족 수준을 비교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37.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험집단 구성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험집단 특성이 자연스럽게 변한다.
- ②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한다.
- ③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평소와 다른 심리적 행동을 보인다.
- ④ 연구기간 중 실험집단의 일부가 탈락해 남아 있는 최종 실험집단 구성원이 최초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38.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은 집행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 ②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모호성을 띠기 쉽다.
- ③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은 집행의 성공 여건은 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이다.
- ④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은 문제 상황의 대응성을 위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통합이 중요하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②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③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권리가 없다고 확인해 준 상대방에게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④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③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한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효과가 발생한다.

3.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허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모든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있다.
- ③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한 경우,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및 동의권은 소멸한다.
-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을 받아서 하는 그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이 있다.

4. 피성년후견인 甲은 성년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 당시 甲이 적극적 수단으로 丙을 속여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계약 당시 피성년후견인임을 알지 못했던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이 있기 전까지 乙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계약 당시 甲이 적극적 수단으로 丙을 속여 乙의 동의를 있다고 믿게 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계약 당시 피성년후견인임을 알았던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 ②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 ④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매매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6. 甲의 생존사실을 모르는 배우자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에 따라 甲소유의 X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다음, 선의의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인도하였다.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에 취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에게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乙과 丙이 甲의 생존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甲은 丙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만일 乙이 甲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선의의 丙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X건물을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7.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지며, 그 범위를 넘어서 행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다.
- ②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 ③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8.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한다.
 - ②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③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은 이를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9.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 ②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③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④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시에 법인은 소멸한다.
10.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 ②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임목을 심은 경우,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임목의 소유권은 식재자에게 있다.
 - ③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채소를 경작한 경우, 그 채소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 ④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한다.
11.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물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②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 ③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시효취득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 ④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12.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②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③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 ④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13. 과실의 수취권을 가질 수 없는 자는?
- ① 지상권자
 - ② 유치권자
 - ③ 동산질권자
 - ④ 폭력으로 점유를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
1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 ②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 ③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 ④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
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박은 경제적·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 ② 폭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매도인이 공박상태에서 매매가격을 실체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헐값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공박상태에 대한 증명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②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계약은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④ 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

17.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는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③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계약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의사표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18. 甲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X도자기에 대해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도자기를 乙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乙은 X도자기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②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도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 ②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자
- ③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 ④ 가장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자

2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착오로 인하여 매매대금액 결정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 ㄴ.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ㄷ.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행위는 내용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ㄷ

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의사표시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상대방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이다.
- ④ 제3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공포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강박행위를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ㄷ.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23.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념의 통지인 채권양도통지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된다.
- ②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③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지만,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된다.
-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24.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丙의 대리인 丁은 이를 알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X토지에 관하여 丙을 대리하여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이 X토지를 선의의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戊는 즉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5.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주어지므로, 그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정해진다.
-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 ③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④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보존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26. 미성년자 甲의 친권자 乙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丙은 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의 대리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丙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② 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악의이더라도 丙은 甲에 대해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선의·무과실이고 丁이 악의인 경우, 丁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악의이고 丁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丁에 대해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7.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②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 ④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임의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 ③ 아내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 ④ 甲의 대리인 乙이 권한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매도하면서 乙 자신의 소유라고 칭하며 乙의 이름으로 매매한 경우

29. 무권대리인 乙은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에게 추인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 丙은 甲에게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丙의 추인 여부에 관한 최고에 대하여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응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④ 만약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②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 사이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한 때로 된다.
3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 ② 당사자 양쪽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③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④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된 경우
32. 乙은 적법한 원인 없이 甲소유의 미등기 X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丙에게 X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 ②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 ③ 乙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지 않더라도 乙이 받은 매매대금 1억원은 甲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다.

3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추인할 수 없다.
 - ③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34.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해제조건이다.
 -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④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5.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 ②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 ④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점유를 침탈받은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 ②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 ③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
 -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3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그 권리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③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④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8.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②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
 - ③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 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 ④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39. 채권자 甲은 2023. 8. 10. 채무자 乙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 8. 25.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乙은 2023. 9. 11.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2024. 3. 20.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甲은 2024. 7. 22. 乙을 상대로 그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 ① 2023. 8. 10.
 - ② 2023. 9. 11.
 - ③ 2024. 3. 20.
 - ④ 2024. 7. 22.
40.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②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③ 본래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한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